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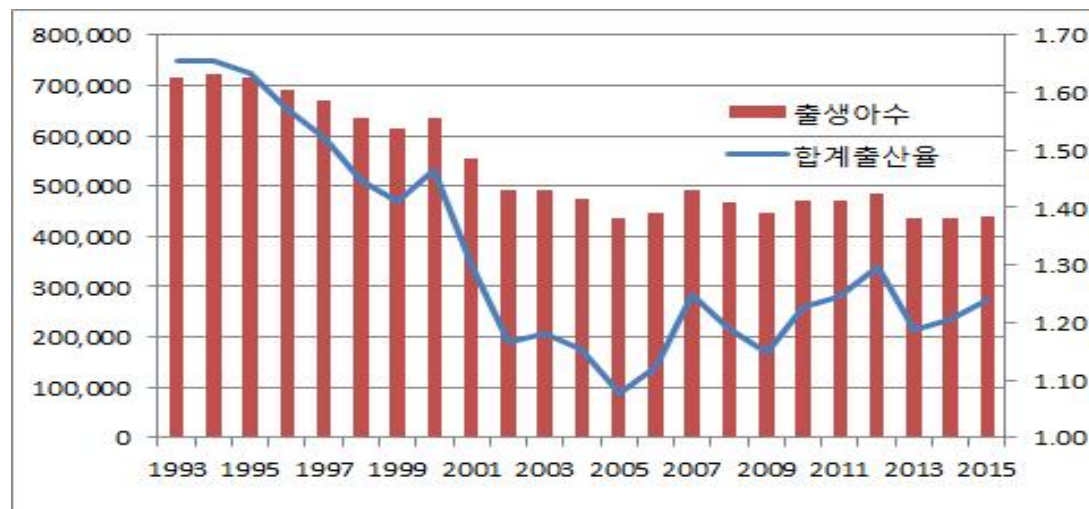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성

2017. 4. 17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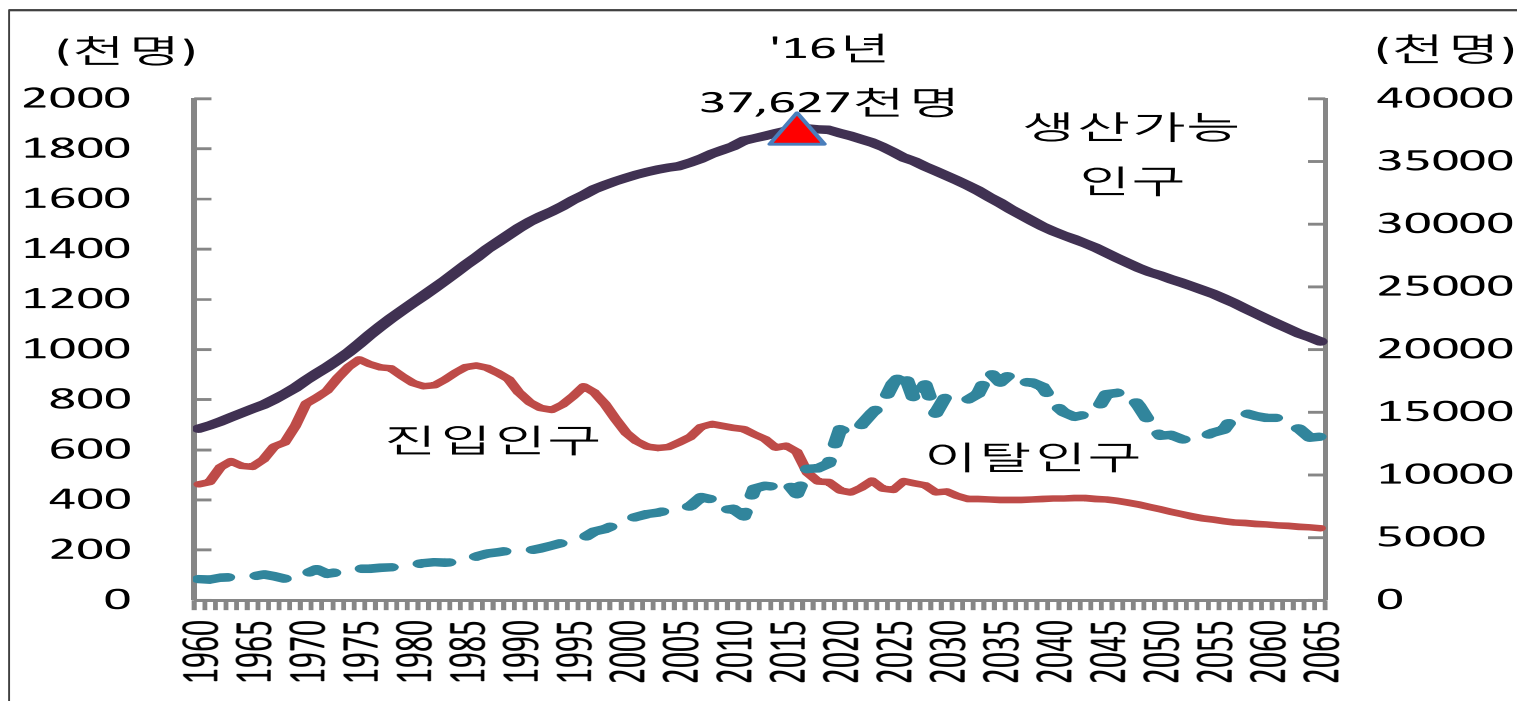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 2000년 1.46 → '01 1.30 → '10 1.23 → '15 1.24
- 출생아수 : 2000년 63만명 → '10 47만명 → '15 43만명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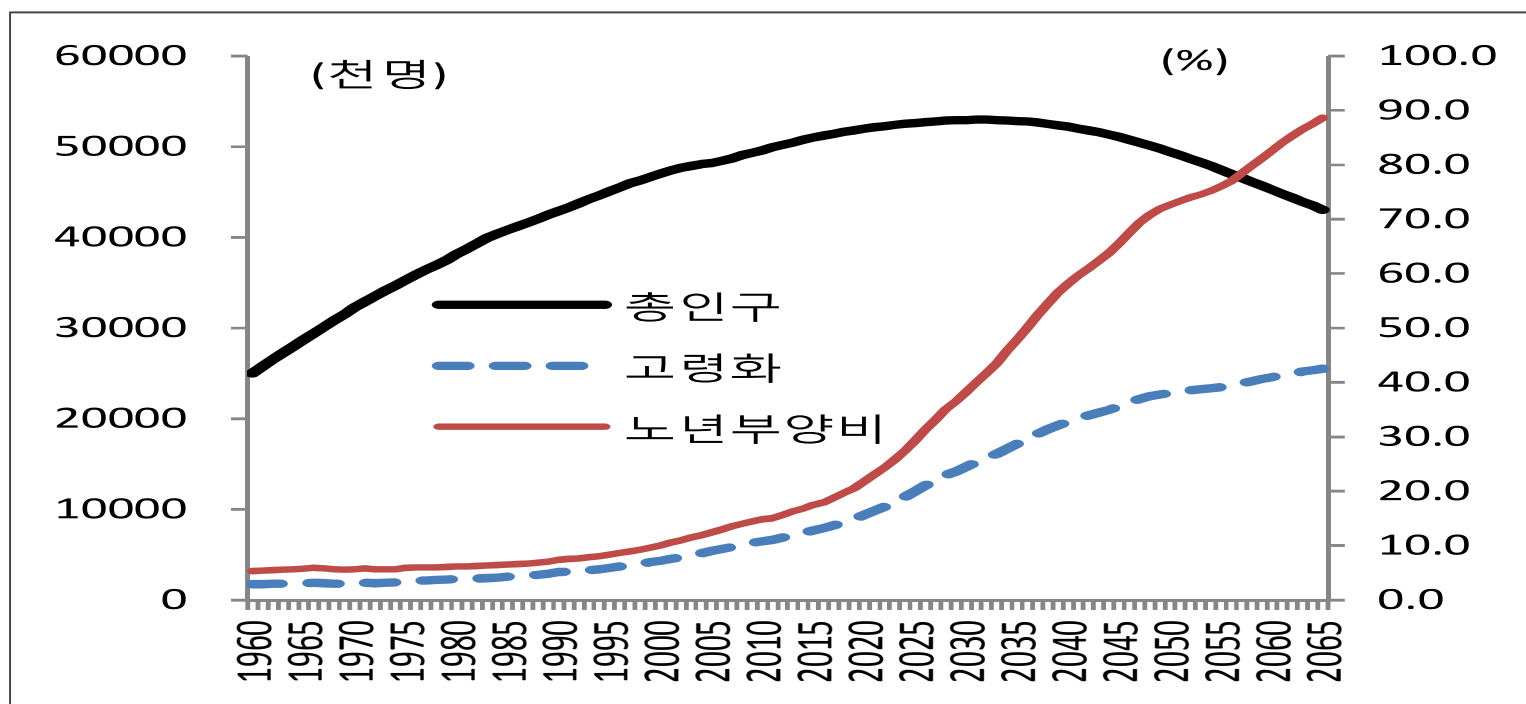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와 연도별 진입·이탈 인구〉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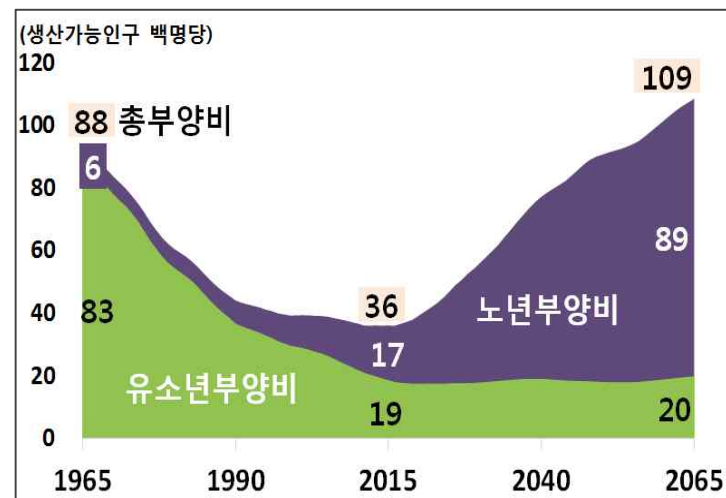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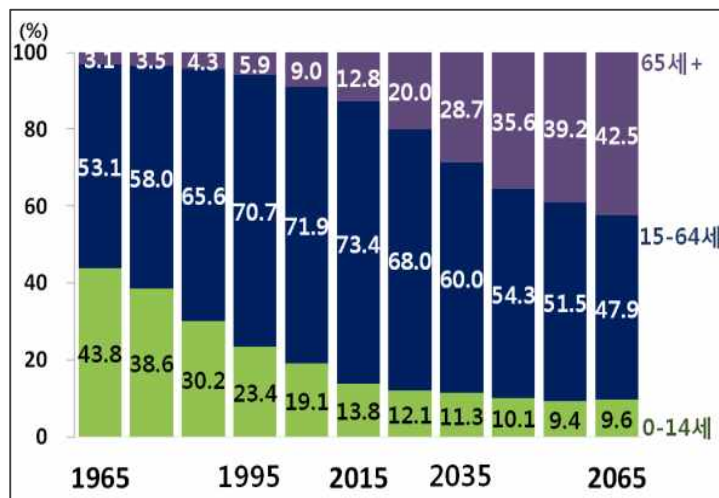
〈총인구, 고령화 및 노년부양비〉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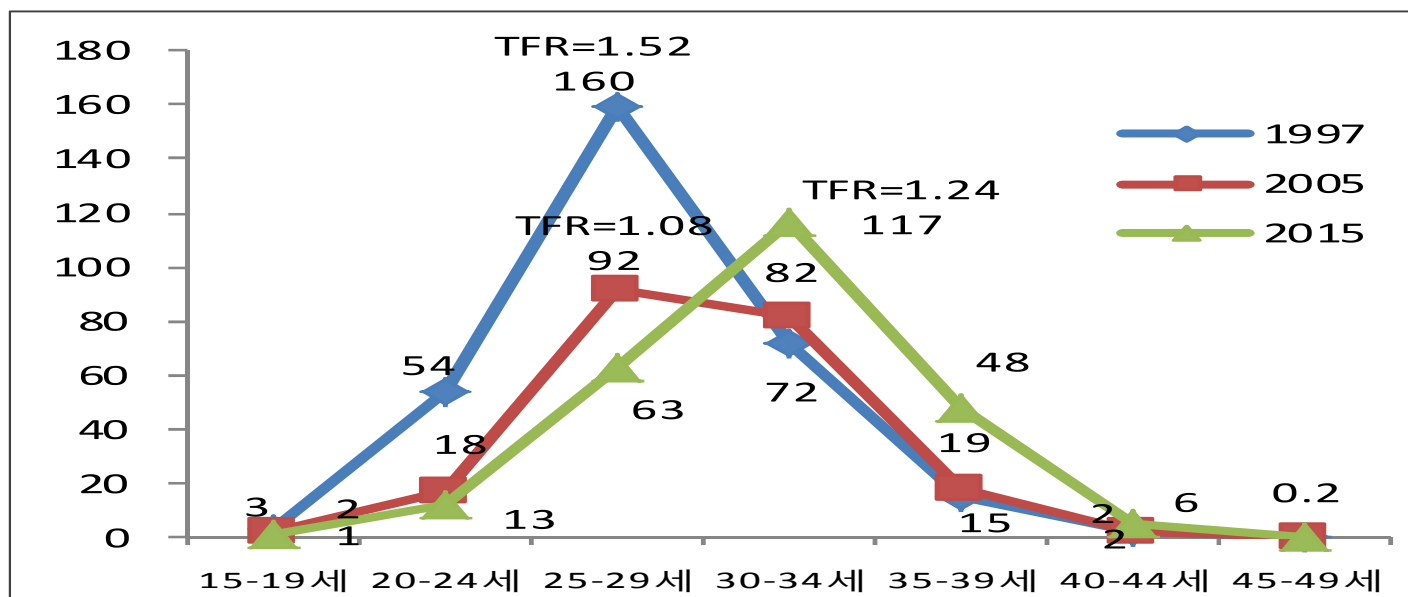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관계
- 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 인구 감소, 노인인구 증가
- 출산율보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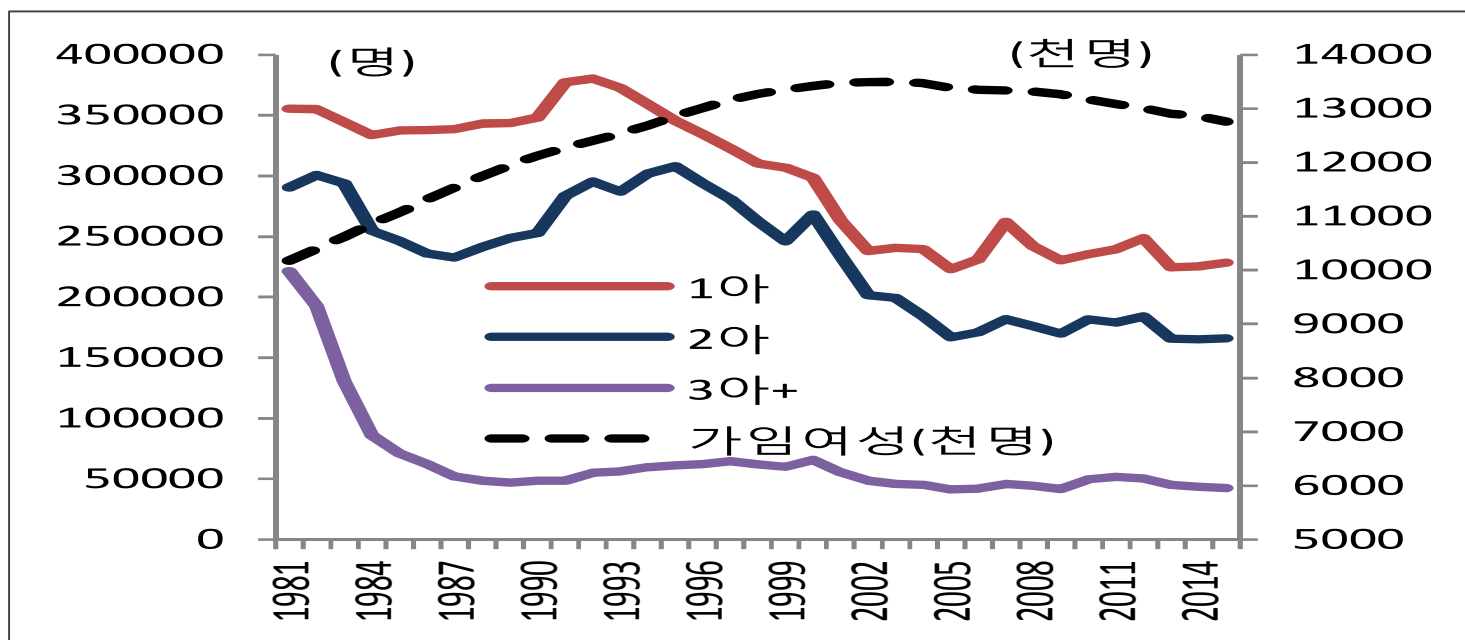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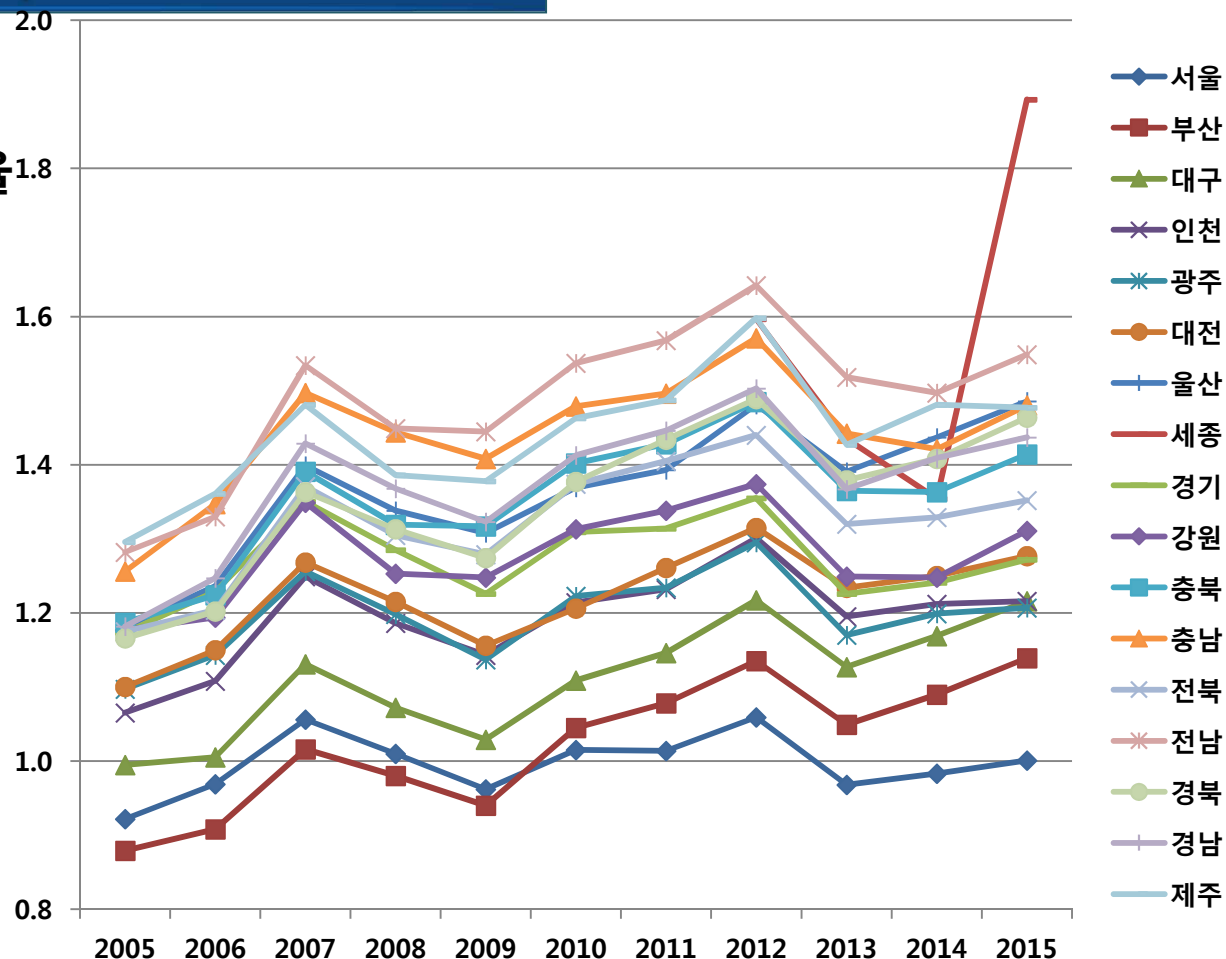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의 변화〉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 시도별 합계출산율 고착화 현상
- 지역 인구구조 변동은 장기지속
- 출생, 사망, 이동
- 지역 인구변동과 전국 인구변동



1. 인구변동과 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 한국의 인구변동 특징
 - 급격한 진행 속도와 저출산 수순 장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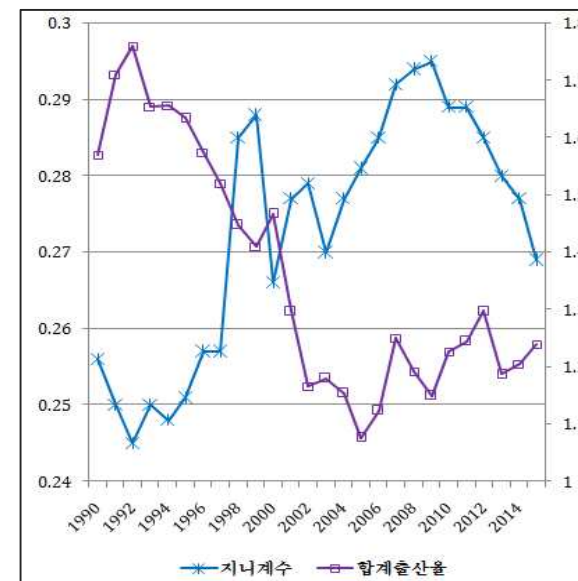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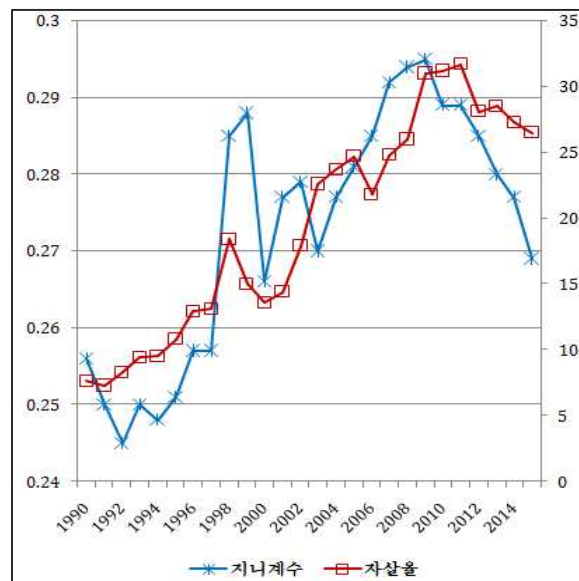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국가	인구대체수준 (약 2.1명)도달시기	TFR 1.3 도달시기	TFR 1.3미만 지속기간	최저수준	최근 TFR
한국	1983	2001	14년(2001~현재, 2014년 기준)	1.08(2005)	1.21(2014)
이탈리아	1977	1993	11년(1993~2003)	1.19(1995)	1.39(2013)
독일	1970	1992	4년(1992~1995)	1.24(1994)	1.41(2013)
일본	1960/1974	2003	3년(2003~2005)	1.26(2005)	1.43(2013)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합계출산율 지표의 사회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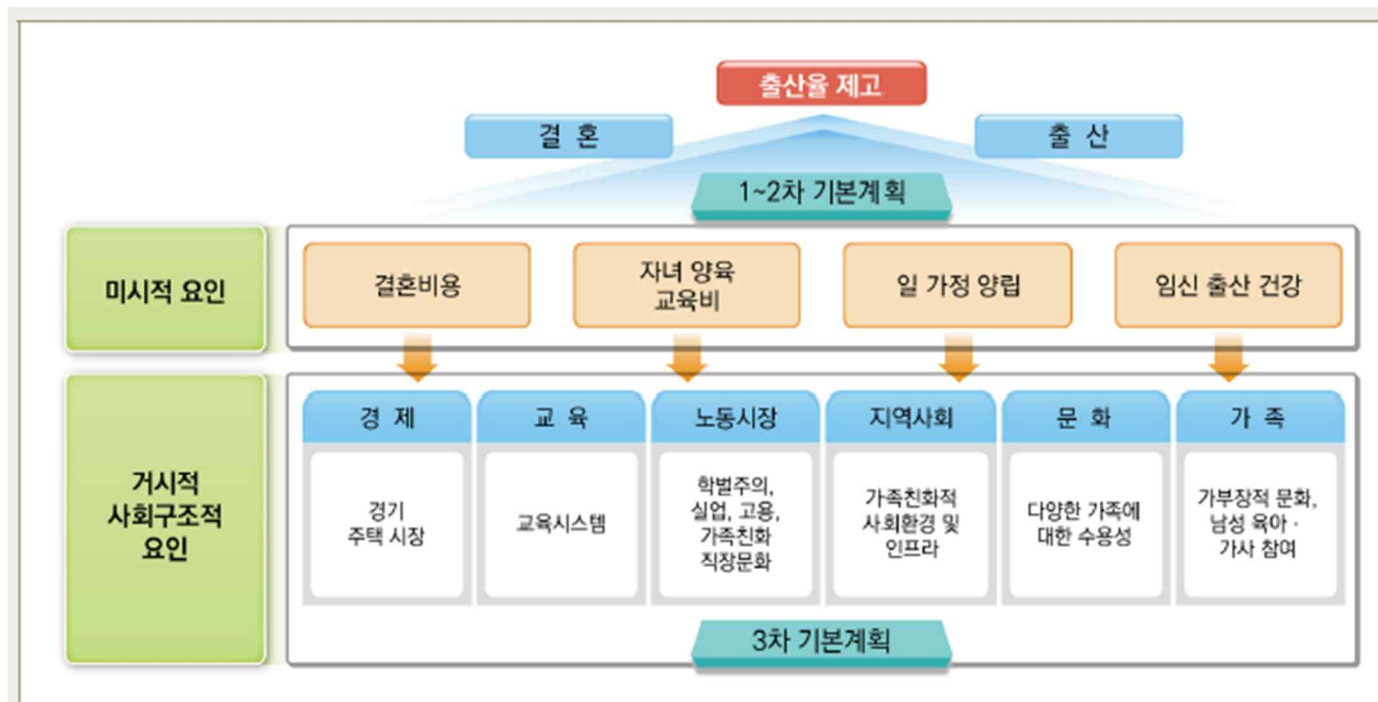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TFR)은 사회 종합 지표,
- 지니계수와 자살률, 합계출산율의 상관성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
 - 경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가족 등 사회 전 영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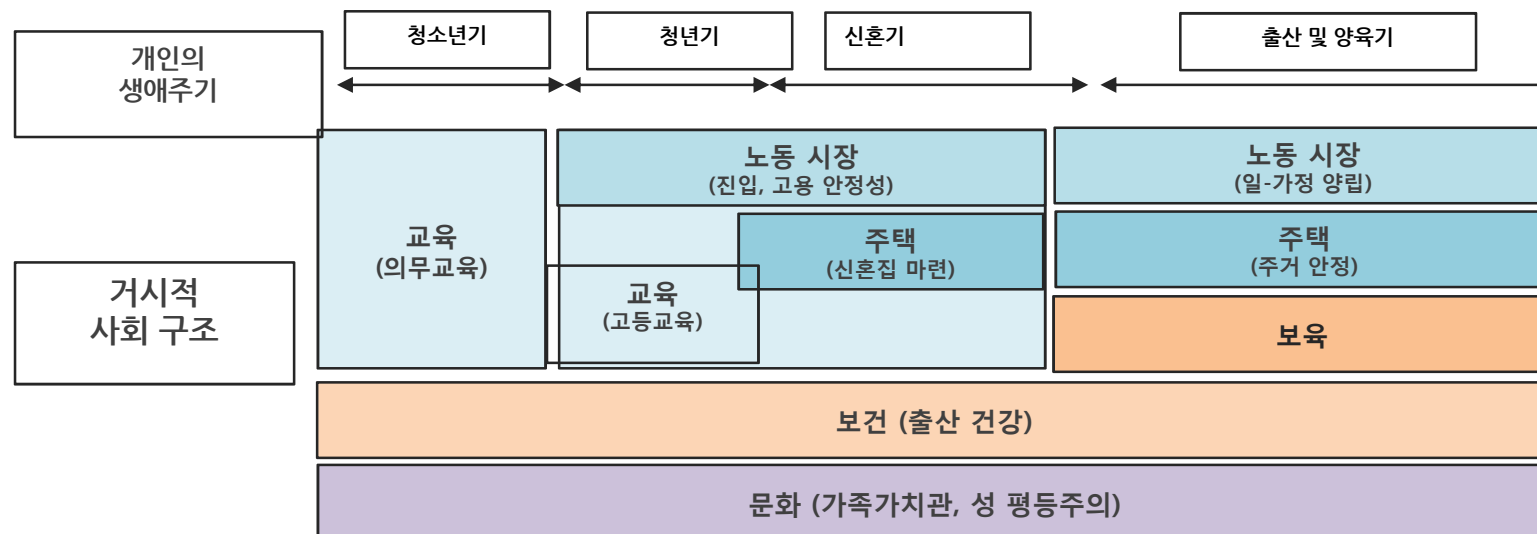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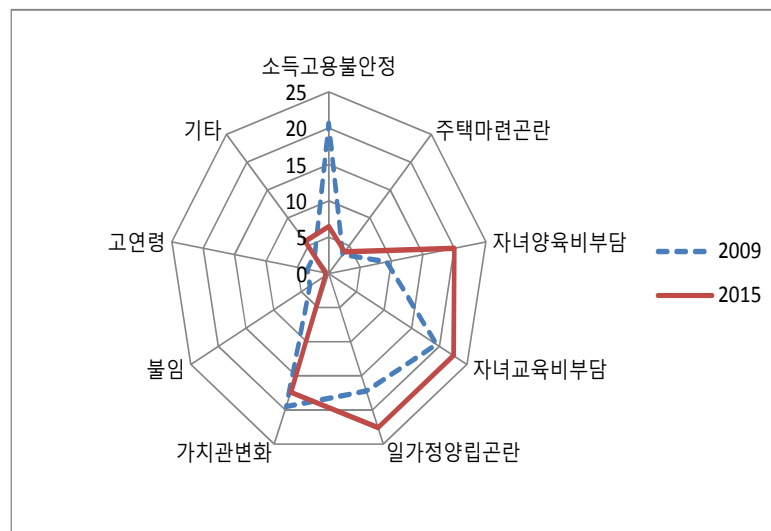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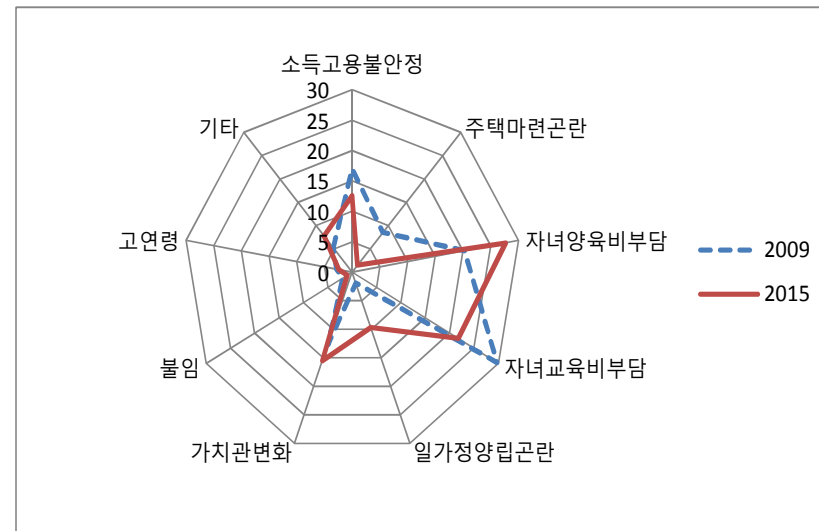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여성 경제활동 출산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20~34세)의 추가 출산 중단 이유〉

취업 여성



비취업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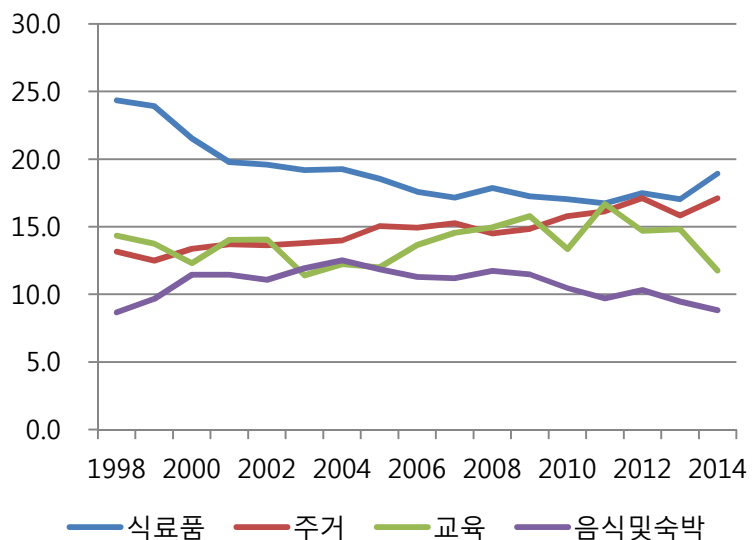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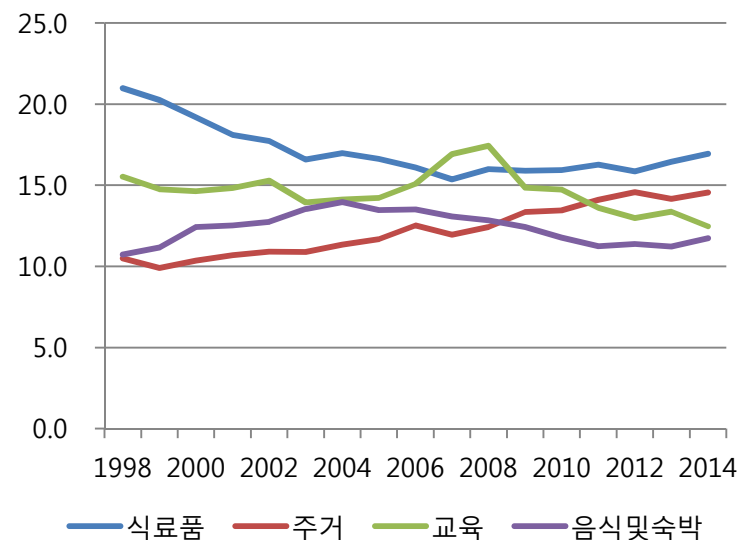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주거비와 교육비

- 소득 분위별 가계지출 항목 변화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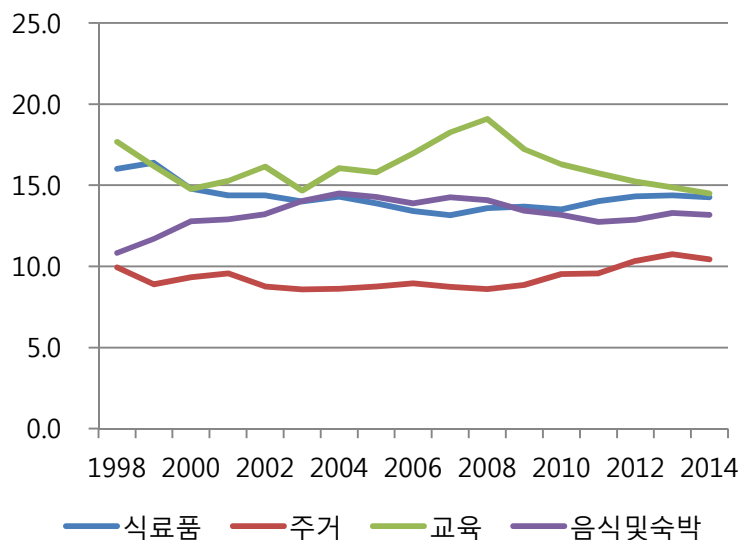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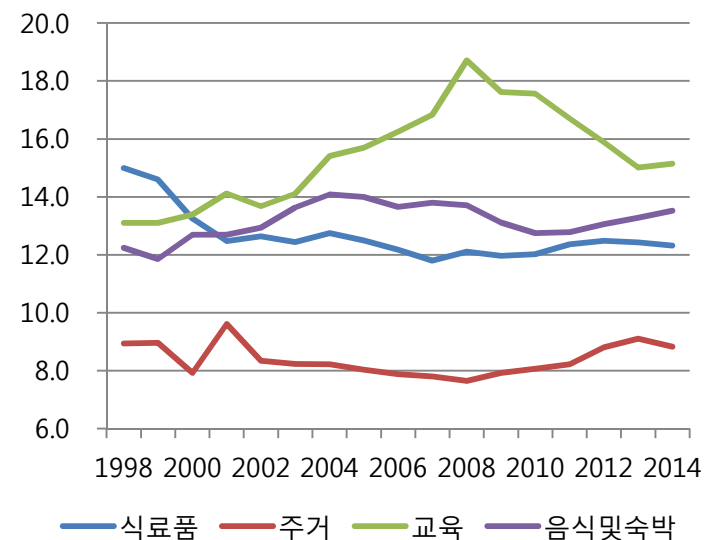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주거비와 교육비

- 소득 분위별 가계지출 항목 변화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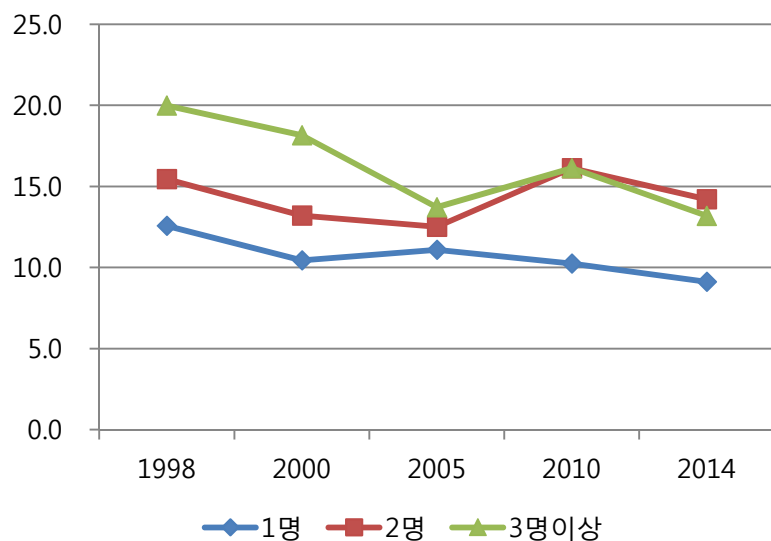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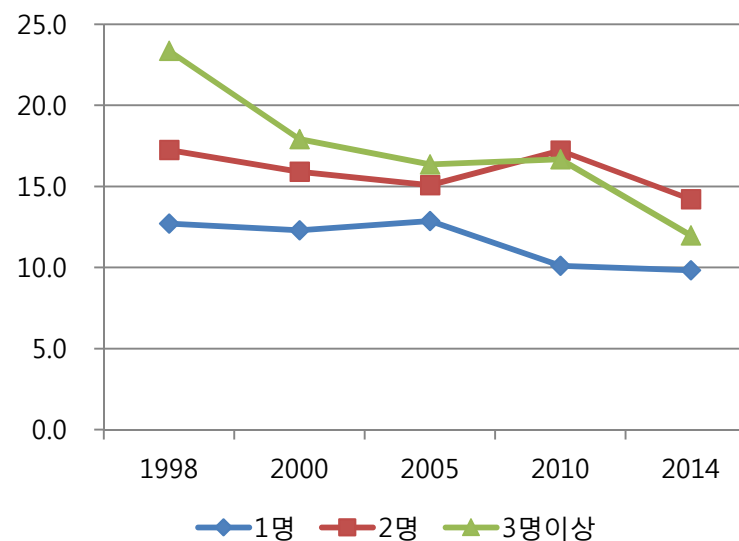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주거비와 교육비

- 소득 분위별 학업자녀수별 교육비 비중 변화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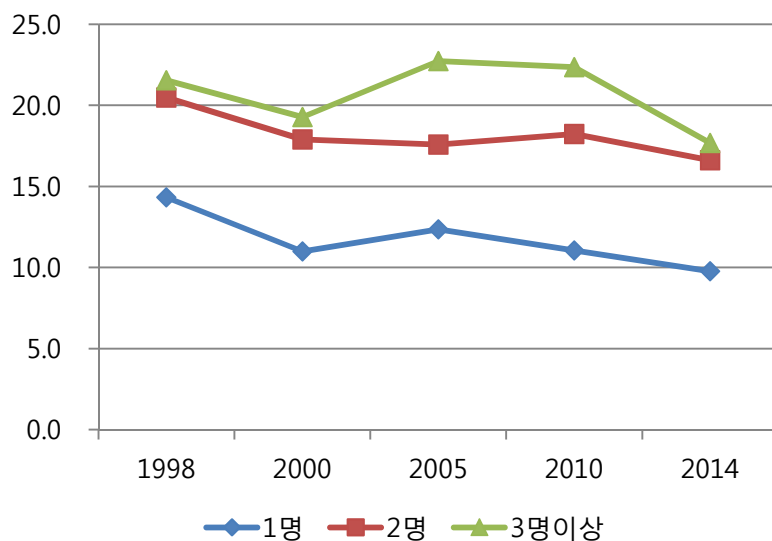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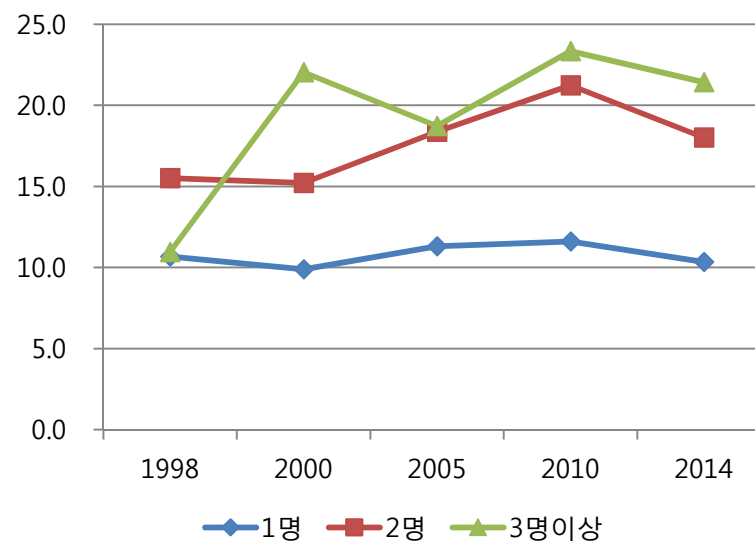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주거비와 교육비

- 소득 분위별 학업자녀수별 교육비 비중 변화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 주요제도

● 일가정양립 제도 2000년대 초반 본격 발전

- 출산전후휴가제도

∴ 90일간 출산전후휴가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5일(3일유급)

급여: 60일분 유급 의무, 30일 유급의무 없음/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17년 인상)

- 육아휴직제도

∴ 만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각각 1년 육아휴직 이용가능

급여: 통상임금 40%(상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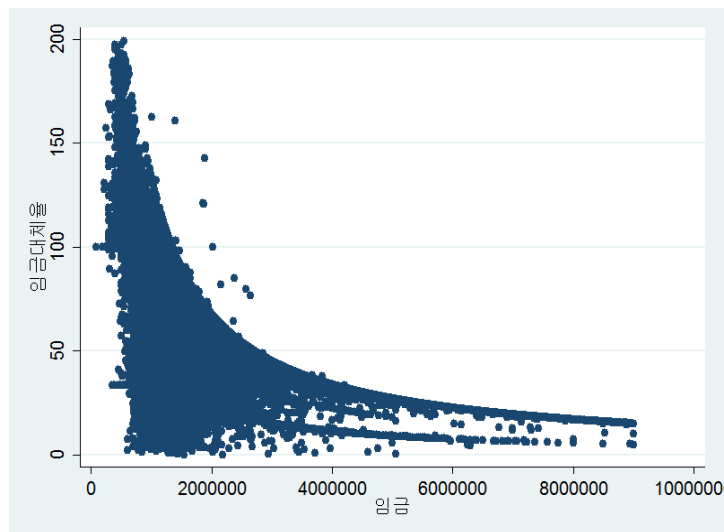
아빠의 달: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사용하는 배우자의 경우

3개월동안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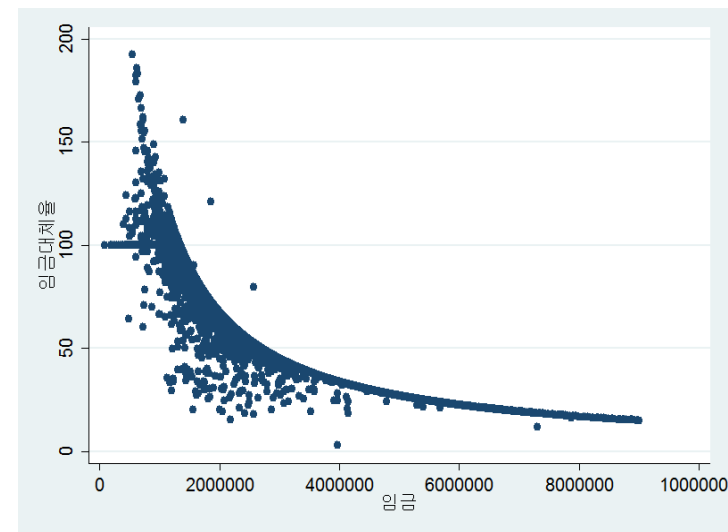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출산전후휴가

<2006~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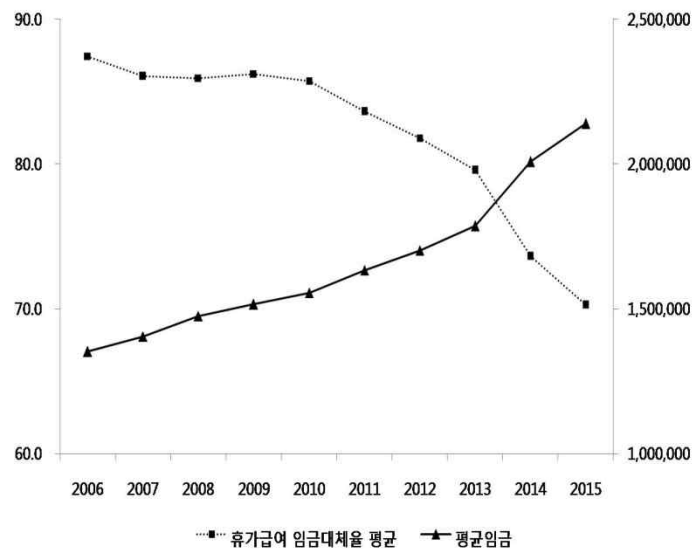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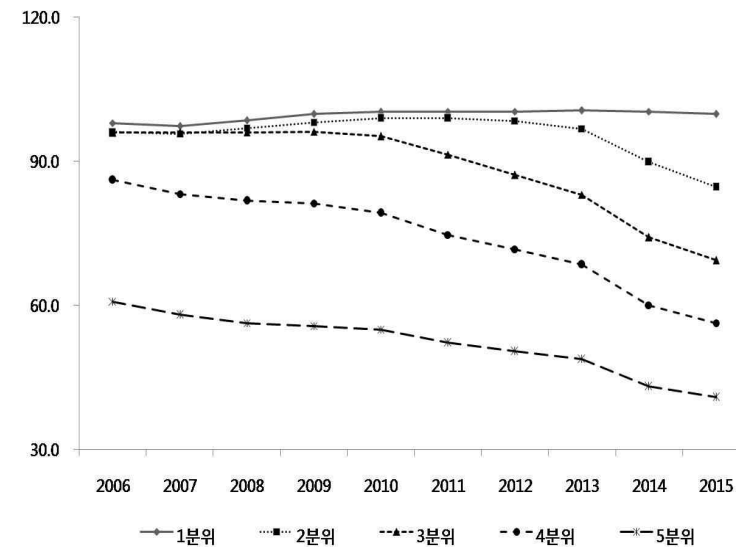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출산전후휴가

<임금과 임금대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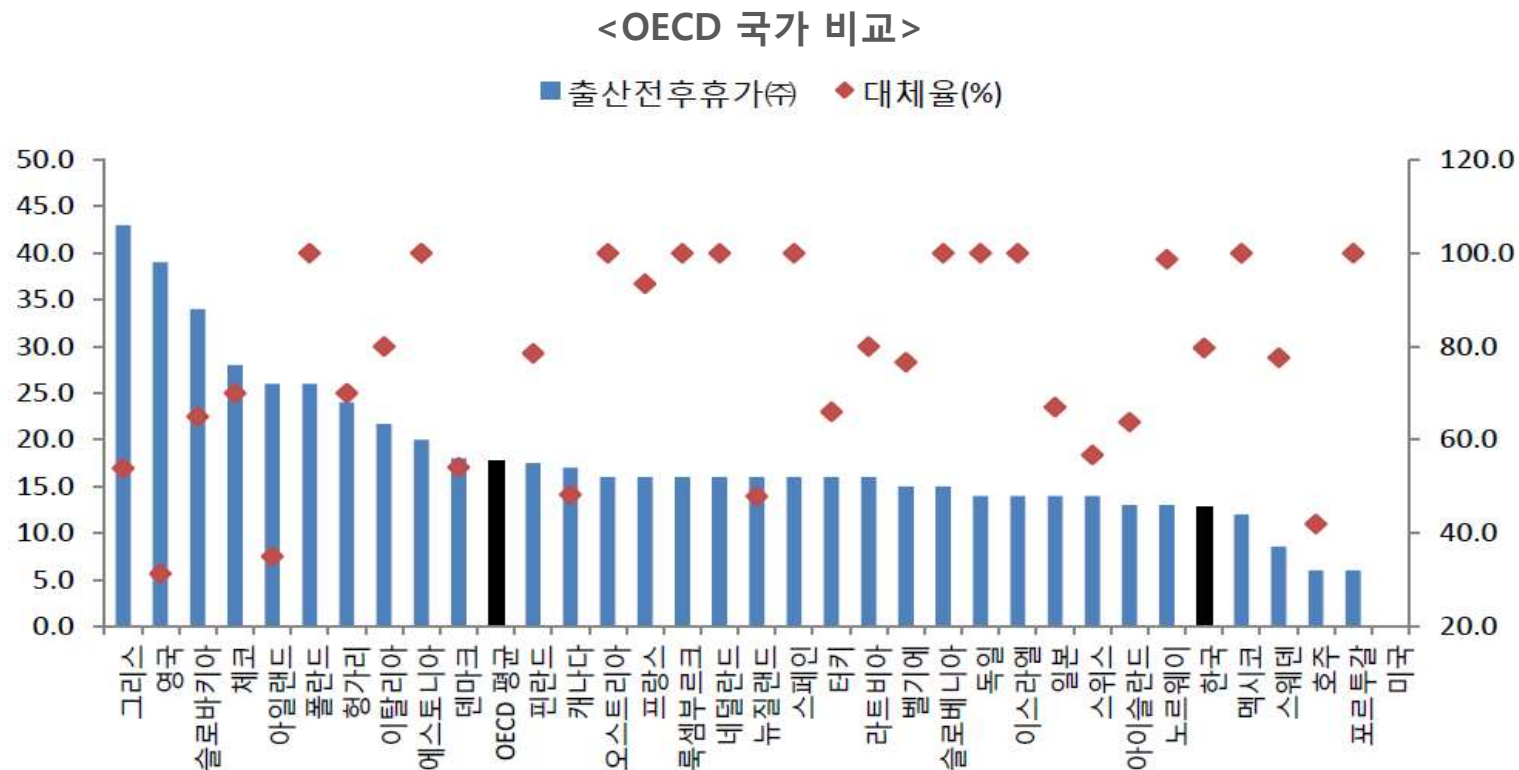


<임금분위별 임금대체율 추이>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출산전후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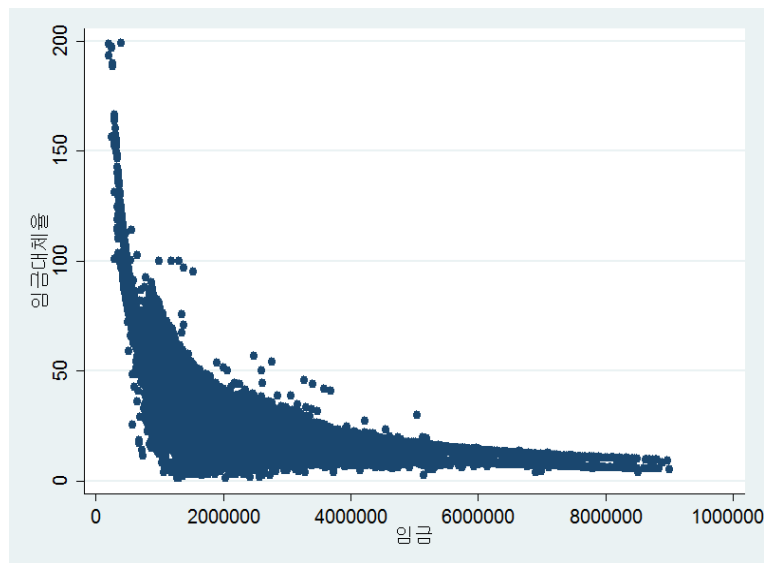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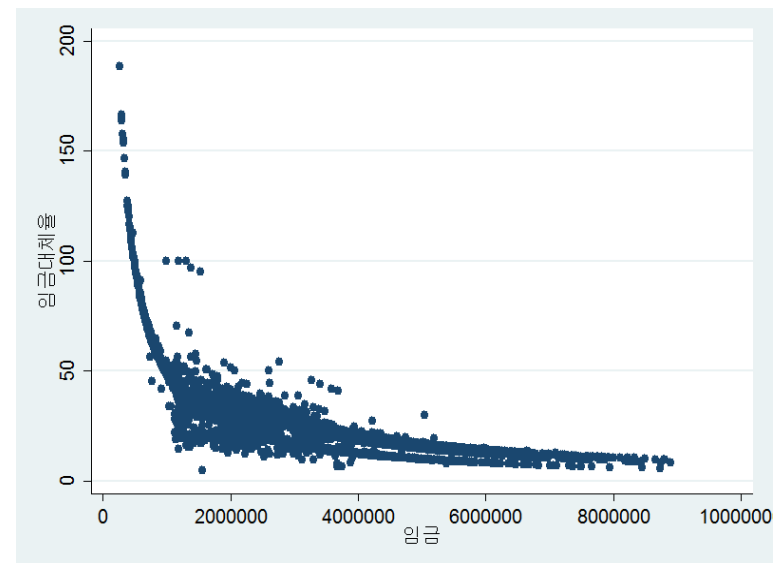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2006~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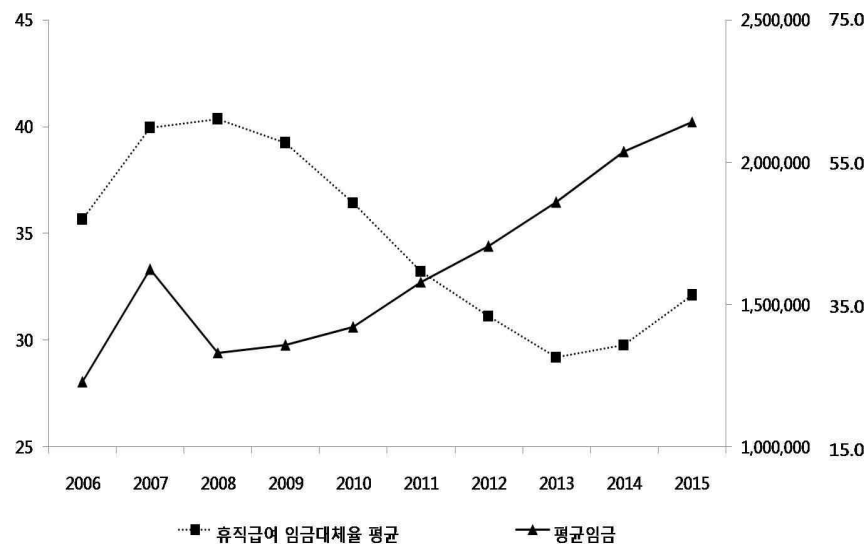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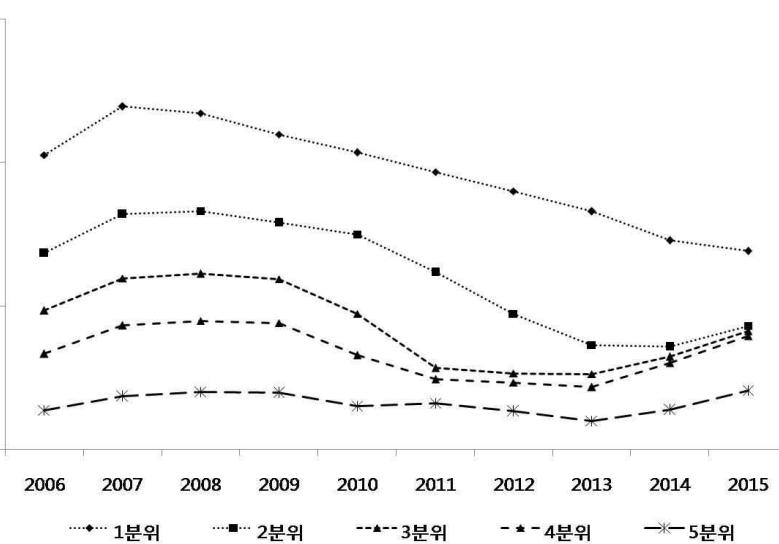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육아휴직

<임금과 임금대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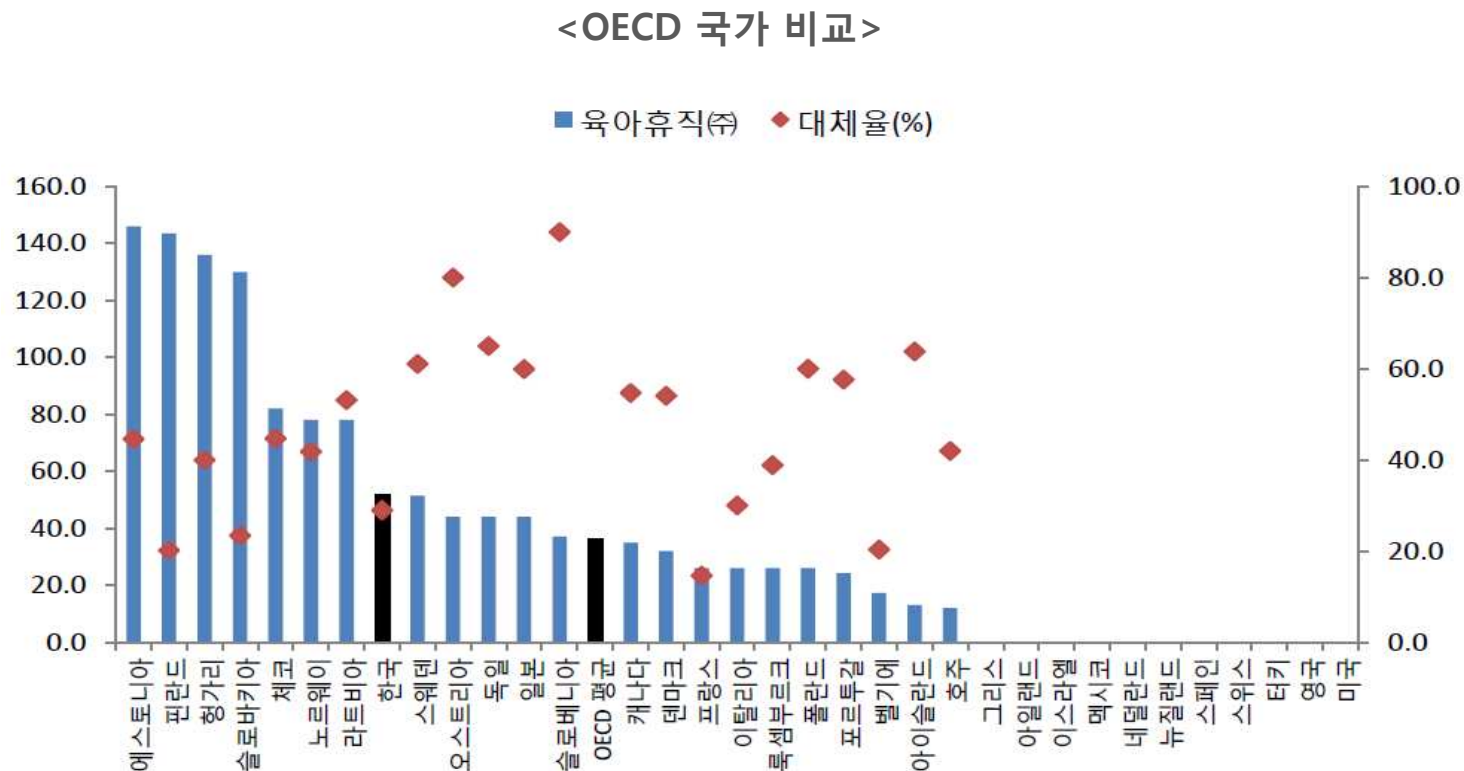


<임금분위별 임금대체율 추이>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일가정 양립-출산전후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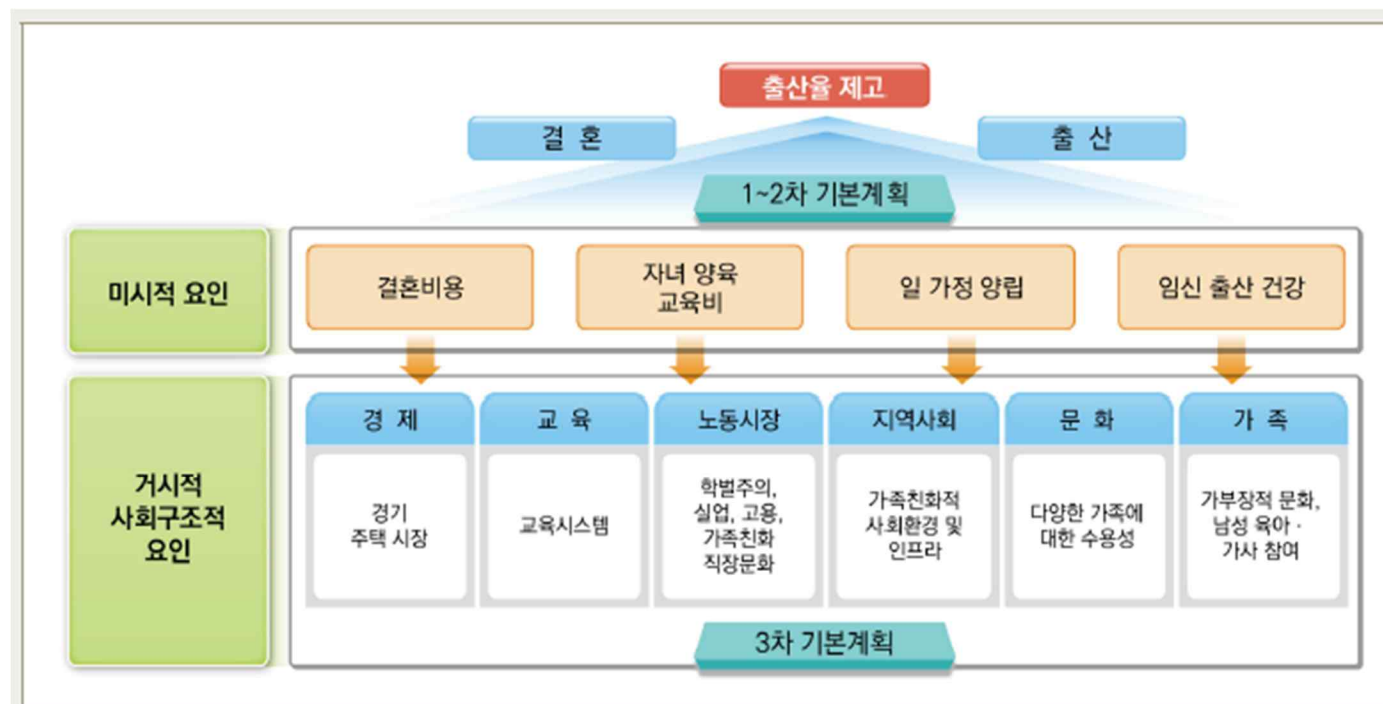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외국 사례

구 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어권)
합계 출산율		1.98 ('14)	1.91 ('14)	1.86 ('13)
사회 문화적 요인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다양한 가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 고출산 흑인·히스패닉
정책적 요인	일·가정양립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지원 (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세제, 연금크레딧 등 간접적 지원 각종 수당 지원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8%	각종 수당 통한 적극적 지원 (육아의 사회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9%	직접적 지원 미흡하나, 세제 등 간접적 지원 저비용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0.4%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공보육 중심	민간보육중심

2.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원인

저출산 현상의 원인 : 외국 사례

구 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 출산율		1.42 ('13)	1.27 ('13)
사회 문화적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50%이상이 카톨릭신자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90%이상이 카톨릭신자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극적 수용 * 법률혼이 보편적 가치	소극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정책적 요인	일·가정양립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원 미흡 * 대졸여성 40% 출산포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양립곤란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1.9%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0.5%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보육 인프라 부족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가적 의제 설정 ('04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 ('05년)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06~'10) 추진
 -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1~'15) 추진
 - ∴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목표로 설정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1차 기본계획('06~'10) : 4대 분야, 237개 과제 추진

분 야	중점 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총 66개)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양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11~'15) : 3대 분야, 231개 과제 추진

분 야		중점 과제
저출산 분야 (총 95개)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결혼, 출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고령사회 분야 (총 78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농지연금 도입,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성장동력 분야 (총 58개)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단 운영 등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 분야: 제1차 기본계획에 19.7조원 투입, 제2차 기본계획에 60.5조원, 총 80.2조원 투입
- 전체 예산 중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약 80% 수준

(단위 : 조원)

구 분	총계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계	'06	'07	'08	'09	'10	계	'11	'12	'13	'14	'15
총계	152.1	42.2	4.5	5.9	8.4	11	12.4	109.9	14.4	18.9	21.5	25.5	29.6
저출산	80.2	19.7	2.1	3.1	3.8	4.8	5.9	60.5	7.4	11	13.5	13.9	14.7
고령화	56.7	15.9	1.3	1.6	3.2	4.7	5.1	40.8	5.5	6.4	6.3	9.7	12.9
성장동력	15.3	6.7	1.1	1.3	1.4	1.5	1.4	8.6	1.5	1.5	1.7	1.9	2

주 지방비포함, '06~'13년은 실적행액, '15년은 예산액 기준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경제 등 구조적 대응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3차 기본계획의 과제 체계도

과제 체계도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거 안정 결혼친화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국가 책임 포용적 가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부모 관점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격차 해소 행태·문화 개선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 활성화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1 만혼추세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청년고용 활성화에 주력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공공·민간의 적극적 고용창출
-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청년고용 안정 강화
- 능력중심 사회 구현으로 학벌·스펙이 중요한 채용문화·관행 철폐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 청년들이 조기 안정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체계 내실화

2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 청년세대부터 예비부부까지 결혼에 이르는 주거사다리 강화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 지원제도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맞벌이 등 체감도 제고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난임 등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1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시스템 확립

-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 고위험 산모 지원, 분만취약지 해소 등 안전한 임신·출산 여건 확충
- 시간, 비용, 정서·심리지원까지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임신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난임 등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2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양육 지원 현실화와 학업·육아 병행 여건 조성
- 비혼·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입양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3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구현

- 모든 아동들이 즐겁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 보장
- 학대, 안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1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확립

- 질 높은 시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 안심여건 강화
- 학생, 군인 등 보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2 공공·민간의 자녀 돌봄 여건 확충

-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 체계 강화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질 관리체계 구축

3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문제 개혁 추진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구조·문화 개선
- 적성과 능력 중심 교육-고용 연계 강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1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혁

- 눈치 보지 않고 일·가정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일·가정양립 실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 장시간 근로의 개선 추진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2 중소기업, 비정규직 남성 등 일·가정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확충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3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 육아기 단축근로 이용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안 논의 추진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분야별 대책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2 홍보·인식 개선 활성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3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 근거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앙과 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 추진기반 강화 배경

- 저출산 고령화는 전 사회적 파급효과를 갖는 거시적, 구조적, 장기적 문제로
다학제적 종합 연구 등 정책 근거 창출기반 마련이 중요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여 매우 방대하므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 한계
- 저출산 고령화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앙과 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 추진계획

-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책연구기관 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구정책 통계 생산 관리체계 마련 및 연보 발간, 인구정책 대학원 설립 검토
- 저출산 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통해 제도도입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의제관리, 조사 및 분석,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사무국설치
-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 역량 강화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 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확산,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 역할 강화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사례

- 설치일/근거 : '15.3.5. /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설치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 심의
-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직 위원 : 도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전북발전연구원,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문가 4인
- 주요기능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조정 및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 관련 검토 /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등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 노인, 아동, 가족, 모자보건 등 분절화되어 있는 조직을 지역단위에서 총괄, 조정 가능토록 지자체 정책추진체계 정비

충청남도 조직 개편 사례

- (명칭) 노인장애인과 → 저출산고령화정책과('15.6.22)
 - * 주요업무 : 출산장려, 노인복지, 노인시설, 보육지원, 복지정책
- (개편사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정책을 출산정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 우수사례에 그치는 정부합동평가를 성과지표에 의한 광역 기초지자체 정량, 정성평가 체계로 개편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평가방안

- 평가 대상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각급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한 정책에 한정해서, 정책의 종류, 내용, 근거, 주민욕구 반영 정도 등
 - * 중앙부처 위임사업, 매칭사업 등은 제외

3.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 평가 내용 : 정책 수립부터 결과까지 포괄
 - 정책수립 :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
 - 자료 : 매년 초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시행계획 중 정책내용
 - 정책집행 : 예산
 - 근거 : 예산 투입이 많을수록 저출산고령사회에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시행계획에 포함된 예산), 지자체 전체 예산(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기반 : 인프라
 - 근거 : 일회성의 전시적, 단기적인 정책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효과 : 합계출산율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출산율 제고임을 전제
 - 자료 : 지자체별 합계출산율(통계청에서 매년 3월 중에 발표하는 잠정치)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시 고려사항

● 합계출산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기초 다지기

- TFR=당해년도 총 출생아수/당해년도 가임여성 총수

가임여성은 미혼기혼 모두 포함, 한국과 같이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증가할 수록 출산율 하락

- 기간합계출산율은 Tempo 효과 반영되지 않는 한계

가임여성 수: 당해 년도 15~49세 연령층을 모수로 계산함으로써,

한 여성의 완결 출산력을 반영하지 못함

- 합계출산율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 사항부터 준비하기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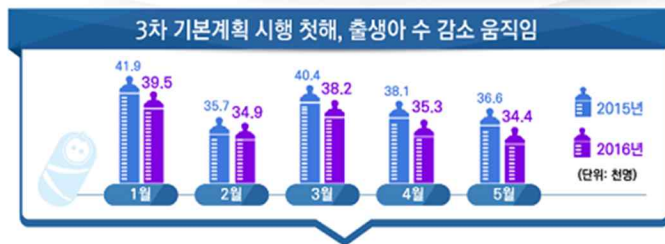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정부가 제시하는 '메시지'의 중요성

- 출산 결정에는 심리적 요인 작용,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가능성이 출산에 영향을 미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성적 메시지의 중요성
- 전통적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은 효과 미비 또는 역효과 우려: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표어 : 아이 좋아 둘이 좋아

2020년 출산을 1.5명 달성을 위한
출생아수 '2만+' 대책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저출산 대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관점의 균형**
 - 인구정책, 경제주의적 관점: 노동력의 문제(이민, 입양, 임신중절), 노동력 대체하면 문제 해결
 - 출산지원정책, 사회정책적 관점: 저출산의 원인 해결, 출산과 가족형성의 행복 추구권 해결
 - 두 관점을 구분해볼 줄 아는 안목,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
- **지역 인구의 합이 한국의 전체 인구**
 - 지자체간 인구 유치 경쟁은 Zero Sum Game
 -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간 분포의 차이보다 지역 내 인구변동의 차이가 중요
 - A 지자체에 공단 설치 → B 지자체에서 인구 이동 → A 지자체 합계출산율 증가, B지자체 감소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추진 방향

● 지자체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

- 패러다임 전환 : 복지정책 중심의 사업 단위별 추진 →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요소의 연계
- 지자체가 정책통합모형을 모색하여 제안 : 지역의 현실은 지역에서 제일 잘 안다
- 정책 분야별 연계성 검토 : 청년고용정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 가족형성(혼인) 지원
 - : 여성고용정책, 경력단절 예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성화
 - : 맞춤형보육의 공백, 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대상 : 청년, 젠더관점에서 여성

- 청년대책 : 저출산 대책 관점에서 청년대책은 만혼화에 대한 대응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한 요인은 만혼화 추세에서 기인 :

혼인이 늦어지면 가임 기간이 짧아지고 → 실제 출산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고용과 주거문제가 핵심 → 가족형성 초기 지원 강화 필요
- 젠더 관점에서 여성 : 가족 내 성평등과 직장내 성평등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Peter McDonald, 2000)

한국에서 가족 내 가사분담의 불평등, 직장에서 임금격차(남성임금의 64% 수준), 여성과밀직종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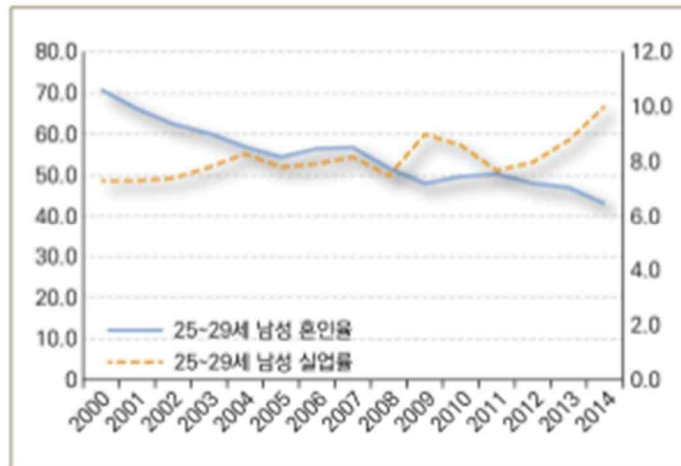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영역 : 고용과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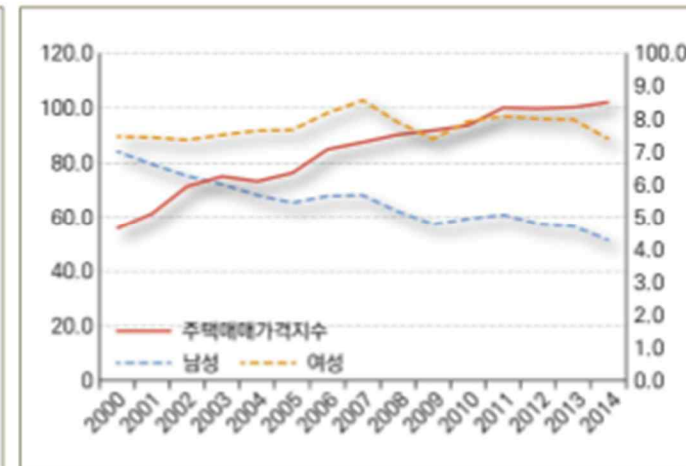
- 청년대책 : 저출산 대책 관점에서 청년대책은 만혼화에 대한 대응
- 청년대책의 핵심은 고용과 주거 : 지역 단위 청년 고용정책 강화

부산드림 아파트 공급 → 지역 단위 주택공급 정책 검토 필요

〈 25~29세 남성의 실업률과 혼인율 〉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혼인율 〉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영역 : 돌봄

- 돌봄 공백에 대한 지역 단위 검토가 중요
- 현재 돌봄 : 기관보육 중심, 가정양육수당, 일부 초등돌봄교실, 제한적 아이돌보미
-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 : 종일형, 맞춤형 각각 문제점 파악
- 가정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수당 이외 프로그램 제한적 :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검토
-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 적성성에 대한 검토 필요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영역 : 가구 기본소득보장

-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부양 체계는 가족중심주의
-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산업화시기보다 가족부양을 비용지출 증가했음에도,
가족부양 책임은 여전히 가족중심주의적(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비중 증대)
- * 일본(임금과 가계소득 보전이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의 대우가 낮은 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다케다 고스케 내각참사관, 한겨레 신문, '17. 3. 21)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수준으로(현재 56%)
- 지역에서 가족부양 기본소득 검토 : 현금지원 통합체계 검토(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영역 : 일가정양립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지역단위 강화

여성가족부 추진 중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지역 내 기업에게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적극 홍보 및 인증 신청 독려

인증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발굴

- 지역단위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검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전국 3개소 운영 중 : 효과는 매우 미흡

지역 내에서 대체인력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지역의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대체인력 수요자와 공급자 Database 확보

4.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자체 저출산대책 핵심 영역

● 핵심 정책 영역 : 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 정책홍보 현재보다 강화 절실

정책 홍보에서 혼인, 출산을 직접 독려하는 메시지는 자제

정책 내용을 충실히 홍보하면서, 혼인과 출산이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 개발

- 인식개선 사업: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 강화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육아휴직 이용권을 주장, 사용자는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할 의무 교육

가족내, 직장내 성평등 교육 활성화

- 교육 및 홍보 예산 편성

감사합니다

